

※현대사회의 발전※

[1] 광복직전의 건국준비활동

- (1) 대표적 건국준비활동
 - 1) 대한민국 임시정부
 - ① 한국독립당의 결성 :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단체들을 통합
 - ②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제정, 공포 :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의 수립 등 규정
 - ③ 조선민족혁명당의 흡수 : 조선의용대의 흡수 → 한국광복군의 보강
 - 2) 사회주의 계열
 - ① 조선독립동맹의 결성 : 민주공화국의 수립 규정
 - ② 조선의용군의 조직 : 중국의 화북지방에서 항일투쟁 전개
 - 3) 국내 : 조선건국동맹의 조직, 일제의 타도와 민주주의 국가의 건설 추구
- (2) 공통 강령 : 민주공화국의 수립

[2] 한국 독립의 국제적 보장과 국토의 분단

- (1) 한국 독립의 국제적 보장
 - 1) 카이로회담(1943. 11) : 미국, 영국, 중국의 수뇌가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결의
 - 2) 포츠담선언(1945. 7) : 카이로회담의 결의를 재확인
- (2) 국토분단의 원인
 - 1) 미·소간의 이해관계 : 38도선을 경계로 소련군과 미국군의 진주
 - 2) 미·소의 군정 실시 → 민족분단의 고착

[3] 8·15 광복(1945)

- (1) 원인 : 우리 민족의 계속된 독립 투쟁
 - (2)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(1945. 8. 15)
 - 1) 광복이후 최초의 정치단체
 - 2) 여운형(사회주의 : 위원장)이 안재홍(민족주의 좌파 : 부위원장) 등과 발족
 - 3) 민족주의 우파의 불참(송진우 등, 한국민주당)
 - 4) 좌익세력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(1945. 9. 6)하여 사실상 해산 → 미군정의 실시로
- ↓
- ① 주석 : 이승만(우파의 탈퇴로 대표성이 약해진 인공의 약점 보완)
 - ② 부주석 : 여운형
- (3) 평남 건국준비위원회의 결정(1945. 8. 17)
 - 1) 평양에서 조만식을 위원장으로 결성
 - 2) 자치활동의 전개

[4] 미군정(1945. 9 ~ 1948)

- (1) 특징
 - 1)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을 인정하지 않음
→ 김구주석은 개인자격으로 귀국
 - 2) 한반도와 총독부에 대한 예비지식이 없었음 → 친일파의 등용
- (2) 중요 사건

- 1)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(1945)
 - ① 미·소 공동위원회의 설치 결정
 - ② 신탁통치의 결정
 - ㉠ 5년 동안, 미·영·중·소 4개국
 - ㉡ 전 국민의 반대 → 공산주의자들은 찬탁으로 전환 → 좌익과 우익의 대립 격화
 - 2) 미·소 공동위원회의 개최(1946. 3. 26 ~ 5. 6, 1947. 5. 21 ~ 10. 27)
 - ① 서울(2차 때는 서울과 평양의 왕래)
 - ②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에 참여하는 정치단체문제로 결렬
 - ㉠ 남한(이승만의 정읍 발언 : 1946. 6. 3)과 북한에서 단독 정부의 수립을 진행
 - 통일정부의 수립 추진 →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실패
 - ㉡ 좌우합작운동(여운형, 김규식, 안재홍) : 미군정의 후원
 - 남조선 과도입법위원의 구성(관선의원 : 대부분 좌우합작파로 임명, 민선의원 : 간접선거로 당선, 이승만계와 한민당계가 대부분)
 - 김용무를 대법원장, 안재홍을 민정장관으로 임명
 - 남조선 과도정부로 개칭
 - ㉢ 남북협상운동(김구, 김규식)
 - ㉡ 미국이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에 상정 →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의 실시 결정
 -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국(1948) : 북한은 거절
 - 유엔 소총회(1948) : 가능한 지역(남한)만의 총선거 결정
 - 반대운동의 전개 → 실패(이승만과 친일파는 지지)
 - ㉢ 남북협상파의 노력 : 선거의 불참 선언
 - ㉣ 제주도 4·3 사건 : 남한단독선거의 반대, 미군의 철수, 극우테레의 반대 등을 주장 → 미군정과 극우청년단체의 가혹한 탄압
 - 제주도 일부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함
 - ㉡ 미국이 한반도의 문제를 유엔에 상정 →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의 실시 결정
 -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입국(1948) : 북한은 거절
 - 유엔 소총회(1948) : 가능한 지역(남한)만의 총선거 결정
 - 반대운동의 전개 → 실패(이승만과 친일파는 지지)
 - ㉢ 남북협상파의 노력 : 선거의 불참 선언
 - ㉣ 제주도 4·3 사건 : 남한단독선거의 반대, 미군의 철수, 극우테레의 반대 등을 주장 → 미군정과 극우청년단체의 가혹한 탄압
 - 제주도 일부지역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지 못함
- 3) 5·10 총선거의 실시(1948)
 - ① 북한과 제주도(일부 지역)의 제외
 - ② 남북협상파와 사회주의계의 불참
 - ③ 이승만(독립촉성국민회)과 한민당의 압승
 - ④ 제헌국회의 구성(1945. 5. 31)
 - ㉠ 이승만을 의장으로 선출
 - ㉡ 헌법의 제정, 공포(1948. 7. 17)
 - ㉢ 대통령 중심제에 의원내각제의 혼합
 - ㉣ 단원제, 간선제에 의한 대통령의 선출, 지방자치제, 농지개혁을 법률로써 정함
 - ㉤ 초대 대통령(이승만)과 부통령(이시영)의 선출 : 간접선거
- 4) 정관사 위조지폐사건(1946. 5. 15) → 좌익과 미군정의 대립 심화

[5] 이승만 정부(제1공화국 : 1948 ~ 1960) : 자유당

- (1)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(1948. 8. 15) -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(1948. 9. 9)
- (2)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
 - 1) 내용 : 친일행위자의 처벌과 공민권의 제한 등
 - 2) 이승만정부의 소극적 태도로 실패 →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함

- (3) 여수·순천 10·19 사건(1948) → 국가보안법의 제정(1948. 11)
- (4) 제 3 차 파리 유엔 총회(1948. 12) : 대한민국을 합법정부로 승인
- (5) 농지개혁의 추진(1950)
 - 1) 산림과 임야의 제외(전국토×)
 - 2) 3 정보 이상의 농지를 유상매입, 유상분배
 - 3) 매년 평균 수확량의 150 % 를 5년 간에 걸쳐 30 % 씩 상환
 - 4) 적산농지와 부재지주의 농지는 인정하지 않음
 - 5) 지주층의 입장 반영
 - 6) 소작제의 철폐를 목적으로 추진

구 분	남 한	북 한
실 시 연 도	1950년 4월(이승만 정부)	1946년 3월
개 혁 안	농지개혁법(산림, 임야의 제외)	토지개혁법(전 국토)
원 칙	유상매입, 유상분배	무상몰수, 무상분배
토지소유상한선	3 정보	5 정보

- (6) 6·25 전쟁의 발발(1950) : 한반도를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발표
- (7) 거창 양민학살사건(1951)
- (8) 발체개헌(1952) : 대통령 직선제, 양원제의 개헌
- (9) 휴전협정(1953) : 국민의 반발
- (10)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체결(1953)
- (11) 사사오입개헌(1954) : 대통령의 중임제한 철폐 → 장기집권의 가능
- (11) 진보당사건(1958)
- (12) 2·4 파동(1958. 12. 24) : 신국가보안법과 지방자치제의 개정안 통과
- (13) 3·15 부정 선거(1960) → 4·19 혁명(1960)
 - 1) 전 국민의 민주화운동(시민, 학생)
 - 2) 자유당 정권의 붕괴 → 과도정부의 구성(허정)

[6] 장면내각(제2공화국 : 1960 ~ 1961) : 민주당

- (1) 국회에서 대통령(윤보선)과 국무총리(장면)의 선출
- (2) 지방자치제의 실시
- (3) 내각책임제, 양원제의 채택
- (4) 민주당의 정치적 갈등, 사회적 혼란 → 5·16 군사정변의 발발(1961)

[7] 군정의 실시(박정희 : 1961 ~ 1963)

- (1) 국가재건최고회의의 구성
- (2) 반공을 국시로 천명, 경제재건과 사회안정의 표방
- (3) 정치활동정화법의 제정 →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 금지
- (4) 민주공화당의 창당
- (5) 민정복귀의 약속
- (6) 경제개발 5 개년 계획의 추진(1962)

[8] 박정희 정부(제3공화국 : 1963 ~ 1972) : 공화당

(1) 정책 방향

- 1) 대통령 중심제, 단원제, 지방자치제의 폐지
- 2) 조국 근대화의 실현, 경제성장, 외국자본의 도입

(2) 중요 사건

- 1) 한일 국교의 정상화(1965) : 반대운동의 전개(6·3 시위: 1964)
- 2) 국군의 베트남 파병(1965)
- 3) 한미 행정협정(1966)
- 4) 국민교육헌장의 반포(1968)
- 5) 3선 개헌(1969) : 반대운동의 전개(학생, 언론), 여·야 국회의원들의 대립, 갈등
- 6) 새마을운동의 시작(1970)
- 7) 7·4 남북공동성명(1972)
 - ① 3대 원칙 : 자주, 평화, 민족대단결
 - ② 최초로 남북한이 통일의 원칙을 천명
- 8) 10월 유신의 선포 : 장기집권의 가능

[9] 유신체제(제4공화국 : 1972 ~ 1979) : 공화당

(1) 성격

- 1) 의회주의와 3권분립이 무시된 권위주의의 통치체제
- 2)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의 선출
- 3) 인권탄압의 자행 →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

(2) 중요 사건

- 1) 6·23 평화통일선언(1973)
 - 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의 주장 → 가입(1991)
 - ② 모든 국가에 문호 개방(호혜평등)
- 2) 상호불가침협정의 체결 제안(1974)
- 3) 부산, 마산 시위(1979) : 유신체제에 반대
- 4) 10·26 사태(1979) : 유신체제의 붕괴
- 5) 과도체제의 수립
 - 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최규하를 대통령으로 선출
 - ② 12·12 사태(1979) : 신군부세력이 군권과 정치적 실권의 장악
 - ③ 5·18 광주민주화운동(1980)
 - ④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(1980) : 신군부세력이 국가의 통치권 장악

[10] 유사한 내용의 정리

(1) 군정의 실시

- 1) 미군(1945 ~ 1948)
- 2) 박정희(1961 ~ 1963)

(2) 지방자치제의 실시

- 1) 이승만정부(1958 ~ 1960)
- 2) 장면 내각(1960 ~ 1961)
- 3) 노태우 정부 이후(1991 ~)

- (3) 과도정부(체제)
 - 1) 허정(1960)
 - 2) 최규하(1979)
- (4) 헌정질서를 중단시키는 계기가 된 기구
 - 1) 국가재건최고회의
 - 2) 통일주체국민회의
 - 3)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

[11] 통일을 위한 노력

(1) 통일노선

- 1) 이승만정부
 - ① 대내적 : 반공정책, 북진무력통일, 협상무용론(북한: 적화통일정책)
 - ② 대외적 :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자유선거
- 2) 조봉암(진보당) : 평화통일
- 3) 장면내각
 - ①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
 - ② 중립화통일론, 남북협상론, 남북통일론, 판문점에서의 남북학생회담 등 다양한 통일론의 형성
- 4) 5·16 군사정변 직후 : 반공을 국시로 천명
 - 평화통일론의 탄압(인민혁명당사건, 통일혁명당사건)

(2) 통일정책의 추진

- 1) 1970년대
 - ① 8·15 선언(1970) : 평화적인 선의의 체제경쟁 제의
 - ②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(1972) : 평화협상의 길이 최초로 열림
 - ③ 7·4 남북공동성명(1972)
 - ㉠ 성격 : 남북한 당국자 사이에 민족통일의 원칙 천명
 - ㉡ 3대 원칙 : 자주통일, 평화통일, 민족적 대단결
 - ㉢ 합의사항 : 남북조절위원회의 설치
 - ④ 6·23 평화통일선언(1973) :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주장(가입 : 1991), 호혜평등
 - ⑤ 상호 불가침 협정체결의 제안(1974) : 평화통일의 3대 기본원칙에 입각
- 2) 1980년대
 - ① 교류제의
 - ㉠ 내용 : 남북적십자회담, 남북총리회담, 남북한 당국의 최고 책임자회담, 남북국회회담, 남북체육회담, 남북경제회담 등
 - ㉡ 결과 : 남북이산가족 고향방문단과 예술공연단의 교환방문 성사
 - ②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제안(1989) : 자주, 평화, 민주주의 원칙
- 3) 1990년대
 - ① 남북고위급회담
 - ㉠ 경과 : 1990년에 시작, 1991년에 남북기본합의서의 채택
 - ㉡ 내용

- ㉠ 남북한이 상호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하고 교류, 협력
- ㉡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음
- ㉢ 의의 : 남북대화에 중요한 계기 마련
- ② 3 단계 3 기조 통일정책의 마련(1993)
 - ㉣ 3 단계 통일방안 : 화해·협력, 남북연합, 통일국가
 - ㉤ 3 대 기조 : 민주적 국민합의, 공존공영, 민족복리
- ③ 민족공동체 통일방안(공동체 통일방안)의 발표(1994)
 - ㉥ 성격 :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3 단계 3 기조 통일정책의 수렴, 종합
 - ㉦ 내용 : 3 단계 통일 방안으로서 자주·평화·민주의 3 원칙과 화해·협력, 남북연합, 통일국가 완성의 3 단계 통일방안 발표

[12]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

(1) 이승만 정부

1) 경제정책

① 기본방향

- ㉣ 농·공업의 균형발전, 소작제의 철폐
 - ㉤ 기업활동의 자유, 사회보장제도의 실시, 인플레이션의 극복 등
- ② 안정시책 : 농지개혁법의 제정, 미국과 경제원조협정의 체결

2) 6·25 전쟁과 복구사업

① 피해상황

- ㉣ 생산시설의 파괴 : 섬유공업과 인쇄공업의 피해가 큼
- ㉤ 국민생활의 궁핍 : 인플레이션의 가속화, 물가폭등, 물자부족

② 경제복구사업

- ㉣ 생산활동의 재개
- ㉤ 공업화 정책의 추진 : 제분·제당공업, 섬유공업, 시멘트, 비료 등
- ㉥ 문제점 : 수입의 의존도가 높음, 농업분야의 복구 부진

(2)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

1) 경제개발계획의 수립 과정

- ① 이승만 정부 : 7개년 계획의 작성
- ② 장면 내각 : 5개년 계획안으로 수정
- ③ 5·16 군사정변 이후 : 재수정하여 1962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

2) 추진 과정

① 1960년대

- ㉣ 1,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
- ㉤ 기간산업의 육성과 경공업의 신장에 주력

② 1970년대

㉣ 내용

- ㉠ 3,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
- ㉡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농어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 운동의 추진
- ㉢ 결과 : 광업·공업의 비중 증가, 중화학공업 중심

3) 성과 : 선진국으로의 발돋움이 가능, 전국의 1일 생활권화, 농촌의 생활향상 등